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8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1_ 반도잉크 우수제품 선정

서울시가 주최한 우수공산품 시상식에서 반도잉크사의 '인쇄잉크'가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1967년 8월3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각 분야별로 133개 공산품이 출품한 시상식에서 잉크 부문의 최고봉에 오른 반도잉크의 인쇄 잉크가 품질 면에서 월등한 점수를 부여받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보는 1960년대 초반부터 그라비아·금속·특수인쇄를 제외한 일반 인쇄잉크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던 상황과 품질의 전반적인 저하로 소비자들이 국산 잉크를 많이 외면하고 있는 분위기를 강조한 뒤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꾸준한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잉크라고 전했다. 또 "잉크 업계가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었던 시기여서 연구비로 다시 투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도잉크가 철저한 품질 인증테스트를 강화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저하지 않은 업체라고 호평했다. 반도잉크를 비롯해 당시 수상했던 업체들에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이 지원됐고 시청광장에 전시됐다.

2_ 인쇄업계 최대 난국

'인쇄업계 사상 최대의 운영난'이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리 기사를 다룬 1969년 8월1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당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인쇄업계의 현실이 반영됐다. 시보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각 업체들의 인쇄기 가동률이 평균 50%대를 밑도

는 심각한 불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과당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시보는 수출 관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장비의 노후와 인쇄 품질의 저하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제방향감각도 상실하는 등 실타래를 풀어갈 만한 대안 부재가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이라고 개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방 이후 잉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이유"라며 "이로 인해 덩핑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급격히 변했다"고 토로했다. 시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요금적정화대책위원회 등의 중재 기관의 재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손질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노후화된 인쇄기를 교체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3_ Cold Type의 사진식자기

1971년 8월1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재미있는 광고가 하나 실렸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CH-B 국산 사진 식자기에 관한 (주)장타이프사의 홍보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과학기술처가 지정한 (재)한국 광학전자연구소가 2년여의 연구 개발을 거쳐 출시한 CH-B 식자기는 Hot Type에서 Cold Type으로 전환돼 맹활약을 펼쳤다는 재미있는 문구가 삽입됐다. 눈에 띄는 점은 한글 서체의 탑재 여부로 10여종이 곧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표명했다. 또 한자 조판에 맞는 서체 환경이 완벽하게 지원된다는 문

구로 미뤄봐 현재와는 다르게 한자의 사용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천종이 넘는 서체가 보급돼 있는 지금과 비교해 보면 당시 획기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CH-B는 무게 150kg에 렌즈는 24개가 부착돼 있었고 글자판은 100매까지 작업이 가능했다.

4_ 무등록 업체 여전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인쇄소들의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974년 8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1970년대 초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불법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보는 또 이로 인해 등록 절차를 마치고 정당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쇄사들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의 단합을 촉구했다. 당시 인쇄사를 운영하던 정식 등록업체는 전국적으로 2300여개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시보는 "이 수치의 절반과 맞먹을 만큼의 인쇄사가 무등록 업체일 것이다"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불법 행위가 성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시보는 이들 업체들 대부분이 프린트, 공판, 문방구, 인장 등을 겸하고 있는 영세업자들로서 개·폐업이 용이해 관계 당국의 정확한 수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5_ 사치성 수도 요금부과

인쇄업체들이 사용하는 물에도 사치성 요금이 부과되던 시기가 있었다. 1970년 8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호텔이나 클럽 등 사치성 유흥업소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됐던 수도 요금이 인쇄업에도 같은 세율로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1960년대 하반기까지만 해도 일반 제조업체는 특례를 인정받아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물에 대한 요금 규제와 일방적인 세율 책정은 없었다. 이는 일부 언론사에서 사치업종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면서 인쇄업종을 거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명확한 확인 절차가 없이 오프셋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규탄 성명서를 준비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종전의 세율과 같은 입방미터당 1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종전의 입장을 철회했다.

6_ 캔압축기 개발

잉크 전문 개발업체인 대한페인트잉크사(대표 한영재)가 캔 압축기 개발에 성공, 시장에 출시했다. 1992년 8월28일자 인쇄신문은 작업 공정 단계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철재 폐용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호평했다. 또 이로 인해 압축 기술을 앞당겨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기계는 당시 잉크사업부 특판팀에서 개발한 것

으로 폐용기의 공간 면적을 10배 이상 줄였으며 작업자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자랑했다. 특히 환경 문제의 주범인 주석이나 알루미늄 같은 용기를 단기간에 압축해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큰 각광을 받았다. 신문은 또 보도 말미에 "작업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쓰다 남은 캔 때문에 작업 시 수많은 불편을 안고 있었던 것이 해소됐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인력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시간 낭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7_ 대국전양면오프셋인쇄기 첫 출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국전양면오프셋인쇄기가 선보였다. 1994년 8월5일자 인쇄신문은 '조립방식 1호기' 출시라는 머릿글을 1면에 게재하며 국내 오프셋 인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일본 아키아미와의 기술 제휴로 원장인쇄기계 서비스(주)대표 김하일에서 출시한 이 양면 인쇄기는 조립품으로 본체 및 부품일체를 일본에서 들여와 제작됐다. 가장 큰 특징은 압통을 기준면으로 인압 조정이 가능했고 통준비 공정과 급지·견당·잉크부 조정이 쉬웠다. 또 반전통 방식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작업 시간을 단축시켰다. 김하일 사장은 "머지 않아 국내 기술자들에 의해 조립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보는 4색기 조립생산도 곧 추진할 것이라는

업체의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기술력 진보의 원천은 곧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흔을 수 있는 시야의 변화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당시 생산된 1호기는 유신문화인쇄사에 납품됐다.

8_ "임대료가 너무 비싸"

1995년 8월4일자 인쇄신문은 중구·성동·영등포·용산구 등의 임대료 문제를 의미 있게 다뤘다. 신문은 "인쇄사들이 임대료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한 인쇄사 사장의 말을 인용해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문은 권리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건물주들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 공정 거래 등을 통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분석에는 당시 서울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소속된 1035개 업체(80%)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당 임대 보증금이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3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인쇄사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는 요인으로 고액의 권리금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쇄공단 등의 건립이 시급하며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장홍일 기자)